



오바마 대통령, 2013 회계연도 예산(안) 발표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오바마 대통령은 2월 13일 정부지출을 삭감하고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4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동시에 운송 및 교육 부문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는 단기 부양책도 포함한 2013 회계연도(2012년 10월 1일~2013년 9월 30일) 예산(안)을 발표함.

- 금번 예산(안)은 3조 8,000억 달러 규모로 2012년 예산보다 0.2% 축소된 것임.
 - 한편, 2012년 재정적자 규모는 1조 3,300억 달러로 4년 연속 1조 달러를 상회하겠으나, 2013년에는 9,010억 달러 수준으로 1조 달러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됨.
-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가계에 대한 세제혜택을 2012년 말 기준으로 종료함과 동시에 법인세 혜택도 축소하며, 버핏세로 불리는 부유층 증세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1조 5,0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대할 예정임.
- 국방비와 보건 분야에 대한 지출은 장기적인 지출삭감 계획에 따라 축소되는 반면, 경기부양을 위해 운송투자와 학교 선진화, 교사 및 경찰 고용 등에 각각 500억, 300억, 300억 달러 규모의 단기적 지출확대 방안이 포함됨.

■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(안)이 과거에 이미 거부된 바 있는 것들이라고 지적하고 예산(안) 처리에 반대할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마찰이 예상됨.

- 공화당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재정적자 해소방안에 반대하고 있으며, 재정적자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Medicare와 Medicaid를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것을 핵심대안으로 제시함.
- 한편, 2월 14일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(안)에 포함된 증세 방안이 소득상위 2%인 가계에 만 해당된다고 밝히며, 공화당의 제시(안)에 대해서는 국방, 사회보장제도, Medicare 등에 대한 과도한 지출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함.

(USA Today, 2/13 등)